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전남 행복시대 이끈다

### 화순서 어울림마당...성과 공유·취약층 복지증진 다짐 김영록 지사 “더 많은 도민 혜택 받도록 사업 확대” 약속

전남도는 12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도내 취약가구를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어울림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구복규 화순군수와 22개 시·군 복지기동대원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어려운 이웃의 생활 불편을 찾아 따뜻하고 아름다운 봉사를 실천해온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기동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는 사전행사와 기념식, 어울림한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립국악단 식전공연에 이어 기념식에선 복지기동대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해 22개 시·군 복지기동대장 임장식과 기동대원에게 배지를 패용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어 복지기동대 활약 영상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상을 돌아보고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또 복지기동대원이 출동해 허름한 집을 세집으로 고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기동대원 모두가 공감하며 하나 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오후엔 축하 공연과 2-3개 시·군으로 구성된 8개 팀이 어울림 체육행사를 통해

기동대원이 하나 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김영록 지사는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생활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복지기동대의 활약이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복지기동대

원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즉석 사진 인화가 가능한 ‘인생네컷’과 포토존, 타로점 및 힐링 뷰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위기 가구지원 콜(120), 교통안전 홍보, 안전 체험 등

정책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전남도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전남의 명품 복지시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복지기동대의 역량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인 ‘우리동네 SOS’ 운영 활성화, 위기가구 지원 콜(120) 연계 취약계층 발굴 등 복지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12일 오전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한마당’ 행사 참석자들이 행복동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일부 변경

### 광주시, ‘국가 의무 규정’ 조항 신설도 지속 요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 광주시가 독소 조항으로 규정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의 일부 문구가 변경될 전망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법제처 등과 논의한 결과, 시행령 3조(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2항의 문구 변경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고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면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이 문구에서 ‘개발계획 변경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땅값을 올리려다 공원 등 공공시설 보다는 아파트 등 개발에 치우치게 돼 자칫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어 3조 2항 전체 삭제를 요구해 왔다.

이 조항은 ‘쌍둥이 법’으로 불리며 함께 입법 예고 중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TK특별법) 시행령에는 없었으나 새로 삽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조항 신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조항이 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무’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3조 2항 삭제와 함께 6조(지원금의 환수) 삭제, 4조(초과 사업비의 지원) 일부 변경,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시기를 담은 조항 신설 등 모두 4개 안을 건의한 바 있다.

부정하거나 잘못 지급된 초과 사업비 지원금

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6조는 TK특별법에도 반영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광주시는 초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담은 4조에 ‘지원 비율 등은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한 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법에서 구성하도록 한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예비 이전 후부터 선정 시점부터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시기를 구체화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또한 TK특별법 시행령에만 들어간 4조 ‘이주자에 대한 생계 지원’과 5조 ‘이주정착지원금’ 등은 광주의 경우 이전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대상지 선정 이후 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법 시행령 3조 2항에 대해 광주시는 자치단체에 과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방부·법제처와 해당 조항 삭제 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며 “만약 해당 조항이 반영될 경우 대구시와 협력해 국가의 의무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을 공동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또 “오는 27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고 법제처에서 시행령안을 조정할 때까지 국방부, 법제처, 대구시 등과 소통하는 등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은 특별법 공포(4월25일) 4개월 이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박선경 기자

## 도,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 육성 본격화

###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역 착수보고

전남도는 12일 광양시청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특구) 지정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획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 육성에 본격 돌입했다.

보고회에는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정인화 광양시장,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과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석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차전지가 지난해 11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각 지자체는 이차전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선점·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포스코퓨처셀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업이 집적화된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현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핵심으로 떠오른 ‘기회발전특구’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로 개인·기업의 투자 유입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

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근거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대통령령 제정 및 관련 법률 개정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정 공모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이 예상되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번 용역에선 이차전지 산업 현황 및 생태계 분석 등을 포함한 특화단지(특구) 지정 신청 준비뿐만 아니라 전남도 이차전지 산업 발전 로드맵 구축과 밸류체인 완성을 위한 관련 기업 유치 방안, 전문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차전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광양만권은 이를 육성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특화단지(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연계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8년  
선진안마기술약재

Luxury Lifestyle

보면 기분 좋고, 앉으면 행복하다.  
최고의 프리미엄 안마의자를 원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REAL PRO MA1 | MA32 | MAK1

Panasonic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